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과 이데올로기의 성격 변화

김송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요 약〉

지난 80년대 말부터 우리는 기존의 세계질서가 뒤바뀌는 세계사의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Gorbachev)가 정권을 잡으면서 추진된 개혁(Perestroika)과 개방(Glasnost)정책의 영향하에 일어나고 있는 동부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변혁은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단언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일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동부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방 및 개혁의 대체적인 경향과 주요 변화 내용을 폴란드, 헝가리, 동독 및 체코슬라키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변화를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서 이들 국가들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려는 즉 탈이데올로기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가까운 장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orm des sozialistischen Systems und Charakterveränderung der Ideologie

Kim, Song-Il
Dep. of Education

〈Zusammenfassung〉

Seit dem Ende der letzten 80er Jahren erfahren wir eine rasche Veränderung in der bestehenden Weltgeschichte, und zwar eine große Verwechslung der Weltordnung, die wir uns noch bis vor kurzem kaum

vorstellen konnten. Beispielsweise ist es die Systemreform, die in den meisten sozialistischen Staaten Osteuropas im Gang ist.

Natürlich besteht es kein Zweifel daran, daß diese Reformbewegung der osteuropäischen sozialistischen Länder unter dem Einfluß von Perestroika- und Glasnostpolitik Gorbachevs in der Sowjetunion stattfindet. Infolgedessen spricht man heute vom Zeitalter der Entspannung des Ost-West-Konflikts. Es ist aber nicht einfach, bestimmt zu sagen, was diese osteuropäischen Länder weitgehend suchen wollen. Trotzdem wird in diesem Aufsatz ein Versuch gemacht, ideologische Charakterveränderung der sozialistischen Staaten in Osteuropa dadurch zu erklären, allgemeine Reformtendenz und Öffnungspolitik und ihre inhaltliche Merkmale in Polen, Ungarn, in der DDR und in der Tschechoslowakei aus politischem, wirtschaftlichem und gesellschaftlichem Standpunkt zu analysieren und vergleichen. Als Folge läßt sich klar feststellen, daß die meisten osteuropäischen sozialistischen Länder bis zur Gegenwart dazu neigen, auf den Marxismus-Leninismus als herrschende Ideologie zu vernichten. D.h. sie sind auf dem Wege zur Entideologiesierung. Dabei handelt es sich darum, daß diese Tendenz in Zukunft stärker als bisher fortgesetzt werden will, und daß ein freies demokratisches System in absehbarer Zeit angenommen werden will.

I. 서론

마르크스는 일찌기 그의 유물사관에서 역사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필연적 전이론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제 출현한지 불과 100년도 못되어 쇠퇴해 가고 있다. 급세기 마지막이 저물어 가는 이 때, 거의 모든 공산주의 체제내에서 사실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천과 단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혁들이 모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의 근본 명제들을 철학적 차원에서 파기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승배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라지고 대신 개인, 인권, 개인의 창의력, 그리고 사유기업조차도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¹⁾는 브레진스키의 표현처럼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소련식 발전 모델인 사회주의는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할 만한 실증적 사실들을 우리는 소련의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련의 개혁정치와 그 여파로 일어나고 있는 동부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미노식 변혁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새 국면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1) 명순희(역), “대실패 20세기 공산주의의 출현과 종말”, 서울 : 울유문화사, 1989, pp.21~22. 원문 : Zbigniew Brezinski, “The Grand Failure :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89.

극단적 대결과 대립의 양상을 보여왔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경쟁은 이미 종결되었으며 협력적 관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정의와 평등의 실현으로 자본주의적 제모순을 극복하려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상이 스스로의 한계속에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빈곤의 재분배와 그에 따른 저항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일삼음으로써 그 가치와 대중적 지지를 상실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기존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방 및 개혁의 경향과 그에 따른 변화 내용을 동부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관하여 보고, 이들 국가들의 지난 40여년에 걸친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사회주의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II. 동부 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 동향

1. 개혁의 요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동부유럽 국가들이라 함은 지리적인 구분에 의한 개념은 아니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강제에 의한 위성화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화된 유럽의 동부에 위치한 8개국 즉, 체코, 폴란드, 헝가리,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동독을 통칭하는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비록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고 소련의 이념과 제도를 모방한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상이한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전통과 배경으로 인하여 소련의 영향력과 통제권으로부터 탈피하여 독자노선을 추구해 보려는 노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1953년 6월 동독의 반소항쟁, 1956년 “폴란드의 10월” 즉 포즈나니 폭동, 같은 해 헝가리의 탈소화 운동을 비롯하여 1968년 “프라하의 봄”으로 알려진 체코의 반소 자유화 운동 및 1980년 폴란드의 자유노조에 의한 개혁운동 등과 같은 대규모 저항시위는 이를 입증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동서 양진영간의 냉전 체제속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 강화라는 미명하에 소련에 의한 무력진압이나 유화정책에 의해 번번히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체제를 더욱 경직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정권을 잡으면서 아직까지의 상황을 급전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는 정치, 사회체제로부터의 개혁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지속적 추구하고 정보의 공개원칙을 뜻하는 개방(Glasnost) 및 대외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냉전체제로부터 탈피하여 평화공존을 지향하고자 하는 신사고(New Thinking)²⁾를 표방하면서 소련 자체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일련의 개혁

2) 이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고명식(역), 서울 : 시사영어사.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개혁과 개편을 추진하려는 과감한 정책시도와 함께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다른 형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그리고 형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와 상호협력력이 없이는 -때로는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활기찬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다”³⁾ 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동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형을 가능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소련의 입장 변화는 동부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탈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대변혁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체제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요인 이외에도 당사국들이 체제 내적 요인으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빨리 재건하여야 한다는 각국이 공히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필요성⁴⁾을 들 수 있다. 소련식 경제 모델 즉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소비에트 모델을 수입한 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체제는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입각한 군수산업육성위주의 중공업 우위 정책으로 특징되어 진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초기단계에서는 어느정도 효율성을 거두었으나 체제의 제약성과 경직성 및 비능률성과 과학기술의 낙후성 등으로 인하여 곧 그 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⁵⁾

예컨대 낮은 생산성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저하는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초래하여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낙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소비재와 생활필수품의 부족 및 질적 저하는 국민들의 불만을 증증시킴으로서 동부유럽 제국주의의 국민경제는 파국이 라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침체의 악순환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비판하고 근본적인 경제운영 방식의 개혁추진을 더욱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끝으로 동부유럽의 체제 변혁을 가능케 했던 또하나의 내적 요인을 들자면 그것은 정치사회체제가 갖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치체제는 전체주의 모델로서 후르트리히(C.J. Friedrich)에 의하면 이의 특징은 ① 단일 이데올로기, ② 단일 정당체제, ③ 테러적 비밀경찰, ④ 대중매체의 독점, ⑤ 무력의 독점, ⑥ 중앙집권적 경제체제 등의 6가지로서 민주주의가 자유질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반면 전체주의는 독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⁶⁾ 동부유럽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치체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복수 정당제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정치 참여가 배제된 채 오로지 공산당의 절대적 우위와 지도력의 독점하에 정치목표가 설정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하위체제가 구성·운영되며, 이에 알맞는 정치문화가 조작적으로 형성된다. 공산당 일당에 의한 이같은 독점적 지위와 역할의 수행체제는 정치권력의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야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정치체제의 통치관리능력의 한계성과 비능률성 및 당관료주의의 경직화와 비대화, 당간부 중심의 새로운 특권층과 일반 서민계층간의 분배 불균형으로 인한 계층갈등 및 부패의 문제를 낳게 하였다.

1987. 라종일(외), “페레스트로이카의 충격과 파장”, 서울 : 예진출판사, 1990. David Holloway, “Gorbachev's New Thinking”, Foreign Affairs, Vol.68, No.1, 1989.

3) 고명식(역), 앞의 책 P.165.

4)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규택(편), “사회주의의 장래”, 서울 : 일조각, 1990, PP.10~17 참조.

5)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허 만, “동구사회주의의 대변혁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 국토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1991, PP.162~167 참조.

6) Hanns Drechsler, “Gesellschaft und Staat”, Lexikon der Politik, 5., neub. u. erw. Aufl., Baden Baden 1979, P.539 참조.

또한 모든 언론매체는 당의 선전이나 홍보를 담당하고 전달매체로서 획일적인 이념주입만을 시도하는 수동적 기능만을 수행할 뿐, 국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집약하여 대변함으로써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원초적인 기능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역시 제한적으로 밖에 허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마침내 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부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대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고르바초프에 의한 새로운 정치적 시도가 결정적인 자극제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2. 개혁의 실태⁷⁾

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난 대변혁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비공산세력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용한 폴란드이다. 폴란드 공산정권은 1989년 4월 5일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와 첫째, 자유노조의 합법화 둘째, 의회 및 선거제도의 변경 셋째, 대통령직 신설 넷째, 시장경제원리의 확대실시를 겨냥한 사기업 육성 다섯째, 생필품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해 온 정부보조금 지급 철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⁸⁾ 이에 따라 동년 6월에는 합법화된 자유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 자유선거에서 자유노조는 공산당을 압도하고 거국 내각을 수립함으로써 40여년에 걸친 통일노동당의 일당 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중 최초로 비공산정부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다.

동년 8월 바웬사는 이제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구제도를 과감히 청산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⁹⁾고 표명함으로써 폴란드의 계속적인 탈공산주의를 위한 시도를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은 경제개혁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근 폴란드는 서방측 국가들과의 자본 및 기술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 자본이 폴란드의 기업이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국영기업의 사유화는 물론 개인의 기업설립 자유화를 인정하는 등 경제의 운영과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중앙계획경제 체제에서 탈피하여 국민경제가 경쟁과 실질위주로 운영되는 실리추구의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EC)와의 관계개선에도 주력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교조약을 맺음으로서 공식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헝가리의 경우 1989년 2월 복수정당제가 합법화 되고 동년 10월에는 집권 공산당인 사회주의 노동당이 자진하여 스탈린식 공산주의 통치원칙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당을 스스로 해체함으로써 또다른 개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산된 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사회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당의 지도적 역할 등 이른바 공산당이 지니고 있는 모

7) 이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자료는 강호성(역), “공산주의, 이렇게 무너지다”, 서울: 을유문화사, 1990을 참조할 것.

8) 梅津和郎, 福田敏浩論, “現代連ソ, 東歐の 政治と 經濟”, 東京: 芙蓉書房, 1985, P.140. 박창희,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움직임”, 국토통일원, 통일문제 연구 제1권 3호, 1989, P.266에서 재인용.

9) 조선일보, 1989년 8월 24일자.

든 특권을 포기하고 민주사회주의 실현, 자유선거를 통한 민의의 수용, 삼권분립과 결사의 자유 허용, 지방자치의 실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시장사회민주주의를 신당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어서 헝가리 의회는 1989년 10월 공산당 일당독재를 청산하고 자유선거에 의한 다당제 헌정국가가 될 것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채택하고, 국호를 “헝가리 인민공화국”에서 “헝가리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¹⁰⁾ 그 후 1990년 4월에 실시된 헝가리의 결선투표에서 사회당(구 공산당)은 전체의석 386석 중 33석을 획득하는데 그친 반면 온건 중도노선을 표방하는 민주포럼(MDF)이 압승을 거둠으로서 전후 40여년에 걸친 공산당에 의한 일당지배체제는 붕괴되었다.

경제개혁 측면에서 헝가리는 “우리는 헝가리에서 자본주의를 고무, 권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¹¹⁾는 민주포럼의 지도자 요세프 안달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서 시장사회주의 경제(Market Socialism Economy)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즉 헝가리는 ① 중앙계획범위의 축소, ② 정부보조금의 삭감, ③ 기업자주성의 확대, ④ 이윤원칙의 채용, ⑤ 노동효율과 임금의 결합, ⑥ 노동조합역할의 확대¹²⁾등으로 일컬어지는 1단계 경제개혁을 넘어 ① 기업의 자유화, ② 이윤규제방식의 도입, ③ 가격제도의 개혁, ④ 투자제도의 개혁 등으로 일컬어지는 2단계 개혁을 진행중에 있다.¹³⁾ 헝가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2단계 경제개혁이 실효를 거둘 경우 3단계 경제개혁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 3단계 경제개혁 모델을 시장사회주의경제라고 한다. 이 모델은 서방측의 산업, 경제 모델과 밀접한데 그 특징은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는 공식의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기본으로 하되 정치와 경제를 중앙통제로부터 지방분권화 하는 자주관리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¹⁴⁾

이미 폴란드와 헝가리에서의 체제개혁 운동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은 개혁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보수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을 필요로 하는 동독의 국민들은 1989년 9월 동독의 11개 지역대표 30명이 모여 신포럼(Das Neue Forum)이라는 재야단체를 결성하고 수십만명의 군중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통해 자유총선거에서 비밀경찰의 추방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보다 조직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국민들은 서독으로의 대규모 탈출을 감행하였다. 동독내의 정치상황이 이처럼 급속히 악화되자 1989년 10월 호네커는 18년간 권력을 행사하던 서기장직에서 사임하고 에곤 크렌츠가 취임하였다. 이어서 1989년 11월 9일 2차 대전후 냉전시대의 상징적 유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었으며, 동독 공산당은 자유총선거 실시, 공산당 일당독재 포기를 의미하는 복수정당제 허용, 동서독간의 국경선 개방 및 여행규제 철폐, 경제정책의 전환 등과 같은 일련의 개혁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동독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이미 체제개혁요구에서 동서독간의 통일실현으로 상승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0) 박정수, “동유럽 대변혁의 의미와 파급영향”, 극동문제 연구소, 공산권 연구 1월호, 1990, PP.24~25.

11) 김경수, “동구권 변혁과 북한의 개방화 가능성”,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제10호, 1990, P.48.

12) 日本 國際問題研究所, “ソ連研究” 第8號, 1989, P.32, 박창희, 앞의 논문 PP.268~269에서 재인용.

13) 梅津和郎-福田敏浩論, 앞의 책 PP.126~129, 박창희 앞의 논문 PP.269~270에서 재인용.

14) 박창희, “신북한 정치론”, 서울 : 일신사, 1988, P.13, 박창희, 앞의 논문 P.270에서 재인용.

이러한 동독사회의 변화와 함께 독일의 재통일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한 서독의 콜 수상은 1989년 11월 동서독의 통일을 위한 10개항에 달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동독은 그간 고수해오던 동서독 분리정책을 포기하고 통일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여 1990년 2월 '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한 4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양독간의 통일논의는 공식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3월에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기독교 민주당(CDU)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연합이 압승을 거두게 되자 통일에 관한 논의는 좀더 구체적인 진전을 보기 시작하였으며 7월에는 역사적인 화폐통합이 실현되고 9월에는 동서독과 미·영·불·소의 외무부장관 회담(4회담)에서 독일통일에 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짐으로서 10월3일 독일 통일은 급적으로 실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1968년 '프라하의 봄'을 통하여 자유화를 경험한 바 있는 체코의 경우도 동독사태에 자극을 받은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점차 확산되자 1989년 11월 공산당 지도부는 권력독점을 양보, 즉 당의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대표적인 인사쇄신을 단행하는가 하면 자유선거를 약속하는 등의 과감한 개혁조치가 취해졌다. 12월에는 반체제 극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이며 재야연합단체인 시민포럼의 지도자 바츨라프 하벨을 대통령으로 하는 비공산연립정부가 폴란드에 이어 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중 두번째로 구성되었으며 1990년 6월에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는 하벨 대통령이 이끄는 시민포럼이 압승을 거둠으로서 체코의 민주화 기틀은 더욱 공고히 되었다. 하벨은 대통령에 취임하자 1990년 4월 사기업 허용법안을 입안하여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7월에는 시장경제원리의 채택을 공식 승인하는 한편 9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고 있다.¹⁵⁾

이상으로 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상황을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의 4개국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 변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개혁의 일반적 특성

1980년대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혁운동은 각국이 갖고 있는 개별적 민주화 경험과 전통, 정치문화 및 사회적 성숙도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코, 폴란드와 동독의 경우 국민들의 대규모 항의시위나 비판적 시각을 지닌 재야세력들을 중심으로 하는 저항운동에서 비롯된 밑으로부터의 혁명입에 비해, 헝가리의 경우 공산당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권력 포기에 의해 개혁 및 민주화의 분위기가 능동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부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예외없이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오던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해 유지되는 당국가체제를 거부하고 야당을 인정하는

15) 서기준, "동구의 개혁과 북한 사회체제 변화의 방향",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 8집, 1990, P.60' 참조.

복수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복수후보제와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는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 국민들은 기존의 당국가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 및 이에 따른 체제변혁을 원하는 강한 열망의 표시로서 비공산계 인사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압도적 승리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이들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자유화 지향정책이 그 내용은 각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개혁동향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붕괴와 당의 권력집중에서 자유총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증시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요약되어 지며 이에 따라 각국의 나라 명칭이 거의 바뀌고 있음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예컨대 폴란드와 헝가리는 인민공화국을 공화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체코의 경우 공식 국명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를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연방공화국으로 바꾸었으며 동독의 경우는 독일의 재통일과 함께 아예 그 국명이 사라진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각국의 정치적 변혁은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와 과거 종주국이었던 소련으로부터는 탈소 자주화 노선을 표방하는 반면, 그동안 적대국가였던 서방국가들과는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 유럽공동체의 가입을 모색하는 등 유럽국가로의 회귀성향을 뚜렷히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날 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경제체제의 모순과 결합은 "① 관료체제의 비대화, ② 경제관리의 경직화, ③ 경제관리기구 기능의 복잡화, ④ 기업의 경제적 자주성 결여, ⑤ 노동자 집단의 창의성 결여"¹⁶⁾ 등으로서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성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일차적으로 경제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그다음 시장경제기능의 강화 및 가격정책의 개혁추진에 경제면의 개혁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개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각국은 관료제도에 의한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로부터 탈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는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최소화하여 각기업별 자주성 및 자생력을 극대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윤동기가 지배하는 자율적 시장경제원리를 대폭적으로 채택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 즉 각기업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당관료 대신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운영을 모색하고 있으며, 은행대출 또는 주식회사 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업운영자금의 자체조달을 가능케 하기 위해 금융제도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침체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생산수단의 국유화 내지는 집단화라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이와 같은 소유형태의 변화에 따라 토지의 소유 및 거래 또한 자유화 되기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의 국가가격에 의한 판매로부터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유가격에 그 유통을 일임하는 등 가격제도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차등적 임금이 적용되는 임금제도의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이윤동기의 부여를 통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진과 창의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동부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은 궁극적으로는 사유 시장모델을 추구하고

16) 박창희, 앞의 논문 P.268.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완벽한 전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계획과 시장경제원리를 적절히 결합하는 시장사회주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⁷⁾ 대외 경제부분에 있어서 과거 이들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서방과의 직접적 교역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코메콘을 중심으로 하는 블럭경제위주의 폐쇄경제정책내지 자급자족식의 경제를 유지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들 국가들은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률의 향상을 위해 필수요건인 자본과 새로운 기업경영방식 내지는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해 서방의 선진공업국가들과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려는 전략하에 보다 적극적인 개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동부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일고 있는 변혁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이는 거의 반세기에 걸친 시행착오끝에 얻어진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들의 실정에 알맞는 새로운 정치적 지표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찾아보고자 하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운동인 것으로 사료된다.

III. 결 론

동부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혁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개혁운동은 처음부터 기존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이며 저항적인 성격을 띠고 출발하고 있었으며, 만약 이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운동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와 그 이데올로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브레진스키가 그의 저서 '대실패-20세기 공산주의의 출현과 종말'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부유럽 국가들에서 일고 있는 개혁의 물결은 공산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탈공산주의가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브레진스키의 견해를 계속 인용한다면 분명히 20세기는 공산주의의 승리의 시대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의 도전에 의해 지배받던 시기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 도전은 공산당 자체가 소멸하자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패러독스는 공산주의가 자유기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능력, 그리고 사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당의 통제를 붕괴시키는 능력에 따라서 공산주의의 성공이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탈공산주의의 체제는 공산주의 이론이 소멸되어 마르크스의 이론이나 과거 공산주의의 방식이 현재 추진중인 공공정책을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상태로서, 요약하면 탈공산주의는 자칭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교리를 더 이상 사회정책의 지침으로 수용하지 않는 체제로서 예상된다.¹⁸⁾ 이어서 브레진스키는 공산주의가 퇴행하는 실현 가능성 있는 단계들을 제시하면서 현공산정권들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확실한 점을 요약해 놓고 있다.

제1단계는 공산주의식 전체주의(Communist Totalitarianism)로서 여기서 공산당은 정

17) 허만, 앞의 논문 P.179 참조.

18) 명순희(역), 앞의 책 P.299.

치체제를 총괄하고 정치체제는 사회와 경제를 통제한다. 이 단계로부터 제2단계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권력 계승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¹⁹⁾

제2단계는 공산주의식 권위주의(Communist Authoritarianism)로서 공산당이 정치체제를 총괄하나 새로이 출현하는 민간사회가 이것에 반발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정치적 방어가 최우선적 정책으로 추구된다. 여기서 제3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층에 의한 구테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²⁰⁾

제3단계는 공산주의 이후의 권위주의(Post-Communist Authoritarianism)로서 이 단계에서 이데올로기의 의식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민간사회에서 정치적 사회로 전환되고 경제최우선주의는 퇴조할 것이다. 따라서 제4단계로의 이행은 소요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혁이 실패할 경우 체제 붕괴의 우려성이 있다.²¹⁾

제4단계는 공산주의 이후의 다원주의(Post-Communist Pluralism)에 도래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정치체제와 사회체제, 그리고 경제체제는 다원주의적 구조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²²⁾

현재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 유럽의 각국은 개혁의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경우 정치적 교리 또는 단일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붕괴 과정에 있으며, 공산당에 의한 정보독점적 통제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식 또한 사회 전반에 활발히 확산되고 있음을 볼 때 브레즈네프의 4단계론을 적용한다면 탈공산주의 단계를 통과하여 제4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1980년대 말부터 동부유럽의 구질서가 무너졌으며 이제 공산주의는 세계 도처에서 퇴조하고 있다. “금세기 공산주의의 종말적 위기는 그 시작이 급작스러웠던 만큼 역사적으로 더욱 드라마틱하다.”²³⁾

19) 명순희(역), 앞의 책 P.302.

20) 명순희(역), 앞의 책 P.302.

21) 명순희(역), 앞의 책 P.302.

22) 명순희(역), 앞의 책 P.302.

23) 명순희(역), 앞의 책 P.22.